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2023년 5월 3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사회 | 정원옥 문화연구자, 대한출판문화협회

발제1 |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발제2 | 정운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지정토론

1. **고경일** 상명대 교수, 우리만화연대
2. **이양구** 연극연출가
3. **이윤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송경동** 시인, 한국작가회의
5. **신민준** 미술작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유정주 위원장님, 블랙리스트 이후 준비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물론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는 다르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6,560억 감소했으며 전체 예산의 1.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교생 카툰에 대한 엄중경고, 공연을 검열하는 등 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침해와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차원의 든든한 지원은 물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접어든 지금이라도 현장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문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를 맡아주신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임연구위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길었던 1년이었습니다.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는 퇴행과 무능의 1년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년여 만에 우리 국민은 역대 정권에서 겪어보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외교·경제·안보 등의 연이은 참사와 퇴보가 거듭되어 국격은 실추되고, 국민께는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문화·예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악몽이 되살아 날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실종의 시대’라는 평가가 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현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문화정책이 아닌 권력자가 원하는 설익은 과제들을 내놓으며 문화예술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이 무색하게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향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천명했지만, 예술인들은 여전히 불안한 노동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 구조, 좌우 편가르기 식의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장,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예술계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려되는 점은 과감하게 지적도하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경험을 나눠주실 문화 전문가, 예술인들이 모인 만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저 역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문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문화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발한지 1년이 다 되도록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1년 문화정책 평가가 토론회를 준비하며 제일 난감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문화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라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비전 및 추진과제”를 보면 “자유·혁신”으로 “K-컬처가 이끄는 국가번영”, “공정·연대”, “K-컬처로 행복해지는 국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이룬 성과를 등에 업고 “K_콘텐츠 경쟁력 강화, K_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문화예술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밀천을 드러낸 것이 전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행동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역설하지만 정작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고 억압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발 후 예술검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 거리 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사건’,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허사건’, ‘윤석열차 사건’, ‘부천애니페스티벌 김건희 풍자 만화 전시 불허사건’, 그리고 지난주 4월 24일 ‘춘천 시화전 김건희 풍자시 후작부인 철거 사건’과, 국가인권위의 “윤석열차” 진정사건 각하까지 윤석열 정부의 예술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승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라는 보도자료에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를 거명하며 전수조사를 발표하였고 문체부는 1월 11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정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막대한 감사인력을 투여하며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 감사원을 동원하여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사업 감사와 판박이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입을 막고 꼬투리를 잡아 배제하겠다는 뻔한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행정부의 협치를 부정하고 파괴합니다. 문체부는 정부입법으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5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소속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법률에 따라 구성된 15개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위원회는 민간과 행정부의 협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성장의 바탕에 행정부와 민간의 협치가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을 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문체부의 위원회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해 터럭만큼의 이해도, 미래를 위한 비전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가치와 비전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예술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블랙리스트의 귀환, 그리고 협치의 파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동시에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저는 정부 문화정책의 표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주의, 문화예술의 자율성 침해 등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을 지키고, 문화예술인들의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문화생태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표류하고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이후(준)의 디렉터 정윤희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의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한민국 문화정책 혁신의 단초를 마련해주신 홍익표위원장님, 김윤덕 간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의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준)’는 앞서 세 차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문화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과제를 공론화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삶의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동의 토대였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료 행정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제기해왔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축적된 경험이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일시적 대응에 그치는 문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고 있는 예술검열 사건과 대안의 부재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블랙리스트의 공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연속 선상에서 홍익표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블랙리스트 재발의 우려와 재발 방지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5개월 동안 논의와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준)은 2023년 3월 8일 국회의원실 간담회에서 주요문화예술단체 86개와 290명의 예술인이 공동제안한 정책과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장예술들의 다섯가지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면 과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에도 법제도의 실체가 모호하게 파악되는 이유는 예술 검열과 불공정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임. 문체부는 예술인권

* ‘블랙리스트 이후’는 문화예술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교훈 삼아 문화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제와 문화정책-행정혁신, 예술인권리보장 정책확대, 피해자 회복(소송), 미진한 진상조사, 사회적 기억(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구를 지향하고 있는 예술단체, 법조계, 시민사회, 개인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정책 확대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에도 그 실체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예술인들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정책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함께 문체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며, 법 개정과 정책 논의,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함

중장기 과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적 재난과 기후위기, 지역분권,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로서 국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선제적으로는 국가문화행정체계를 총동원한 블랙리스트를 교훈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고 ‘소통’과 ‘분권’의 원리로 대안 전략을 예술현장과 함께 논의해야 함

논의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통해 관련 쟁점과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토대였던 관료 행정의 반민주성, 독단성, 예술인 배제, 공공성 훼손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촉발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논의하게 되어서 더욱 뜻 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예술의 발전과 블랙리스트 재발과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객관화, 공론화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국가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퇴행하는 민주주의에 대안으로서 국회- 예술현장(주권자) 간 문화정책 실행체계 평가, 법체계 정비, 입법의 실질적 협의를 통하여 사회적 대안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발제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3. 5. 3.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1. 문화정책의 현재성

(1) 급격한 사회변동과 다중위기 도래

- 기후위기와 재난의 일상화
- 기술혁신(GNR)과 자동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 사회
- 서울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 사회적 부(자원)의 독점과 경제적 양극화

(2) 변화하는 세계관과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결과 대응으로서의 문화(정책) : 생태문화사회, 커뮤니티와 관계의 복원, 치유와 힐링, 지속가능 혹은 탈성장 도시문화라이프스타일 등
-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존재들(생태, 기술 등)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패러다임 필요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전통 등) 분야와 해당 주무부처의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도시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

(3)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모순과 한계

- 정치·행정과 시민·현실 사이의 가장 간극이 큰 정책 분야 : 문화적 가치와 감각에 대한 정치·행정의 후진성 구조화
- 문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진영 논리 구조화 : 사회적 검열 일상화, 비상식적인 인사 정책, 선거 공약과 개별 사업 중심의 정책 구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재, 정치권력 중심의 성과주의 심화 등
- 국가 주도 문화정책의 한계 : 법제도와 예산 편성 중심의 막개발 반복, 이해 관계 중심의 형식화된 문화정책 환경 형성, 관료주의 일상화 등

2.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현황

(1) 윤석열 정부의 문화분야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목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윤석열 정부의 문화 분야 6개 국정과제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국정과제56)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국정과제57)
 -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국정과제58)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국정과제 60)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국정과제 61)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가치 제고’(국정과제 62)
-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공약 부재가 새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의 부실화로 이어짐
- 문화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는 달리 개별 사업 중심, 성과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음

(2)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① 2022년 업무계획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추진 방향	① (자유) 자유를 기반으로, 독창성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② (공정)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림 ③ (번영) 문화를 통해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리더국가 역할 확대
핵심 추진 과제	① (1단계) 국민 품으로 → (2단계)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 ② 우리 경제의 도약, K-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③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④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2022년 7월.

-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주무 부처 업무계획 보고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빈약한 업무계획 진행 : 총 11페이지, 1/3이 청와대 관련 내용
- 문화정책의 빈곤함과 퇴행을 우려해야 할 수준의 업무계획 내용
 - 문화정책을 기존 공보처 수준으로 전략시킴

- 대통령 국정 홍보 중심의 업무 계획 수립
- 청와대 개방에 따른 홍보와 활용계획이 큰 비중을 차지
-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함
 - ‘자유와 공정’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하였으나 문화정책 차원의 실질적인 자유, 공정의 확장을 위한 정책 담론이나 핵심 사업 부재 : 정치적, 이념적 수사의 반복
 -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 자체가 부재 : ‘글로벌 문화리더국가’라는 시대 착오적인 성장주의·발전주의 수준의 경쟁력 강화만 반복
 - 오히려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정치적으로 희석화, 탈개념화하는 접근을 반복
- 지역균형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부족한 채 지역별 관광사업 확대로 접근
 - 지역균형에 대한 문화적 개념과 방법 부재한 채 관광 사업화
 - ‘고유 문화자원으로 지역 브랜드화’,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 ‘관광두레, 지역 청년의 新동력’ 등이 주요 내용

② 2023년 업무계획

비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한국문화(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가치	자유·혁신 공정·연대		
목표	케이-콘텐츠, 수출 강자 위상 강화	한국(케이) 관광으로 국제관광 무대 주도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확대
	콘텐츠 수출액 (‘21) 124억 달러 →(‘23) 150억 달러 →(‘27) 220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 수입 (‘21) 97만 명, 103억 달러 →(‘23) 1천만 명, 160억 달러 →(‘27) 3천만 명, 300억 달러	문화체육활동 참여율 <small>문화 체육</small> (‘21) 34% / 61% →(‘23) 75% / 64% →(‘27) 85% / 70%
핵심 추진 과제	(자유·혁신) 한국문화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번영	① 케이-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승부수(게임체인저)	
		②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공정·연대) 한국문화 (케이컬처)로 행복해지는 국민	④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⑥ 현장 속으로, 다시 뛰는 한국(케이) 스포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2023년 1월.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
 - 'K-콘텐츠, 수출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 '2023년 관광대국 원년'
 - '예술, K-컬처 차세대 주자'
 -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 '약자 프렌들리로 모두가 누리는 문화'
 - '다시 뛰는 K-스포츠'

-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사업 계획을 제시해야 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들이 반복·누적되는 업무계획 제시
 - 문화정책의 비전, 방향, 일관성 등 부재 : 개별화되고 나열된 방식의 사업 구조
 - 문화정책의 전문성 확보에 실패 :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와의 소통 체계, 협력 구조 부재
 - K-combo, 콘텐츠와 관광에 대한 과몰입에 따른 불균형한 정책 구조 심화

-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의 관료주의 문화정책 일상화 :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업무계획에 등장하는 용어만 봐도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태도가 선명
 - 장애인·약자 정책에서조차 ‘최초’와 ‘스타’를 강조
 - 관광은 시대착오적인 ‘대국’을 목표로 설정
 - 대부분의 사업 앞에는 접두사 ‘K-’가 습관처럼 붙어 있음
 - 다양한 문화 현장과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업무계획 자료 전문을 찾아봐도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

-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계획 자체가 실종된 업무계획
 - 국정과제와 개별 사업 중심으로 편향된 문화정책 구조가 일반화됨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제시된 업무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전반의 현황, 쟁점, 과제, 대응계획 등이 부재
 - 국가 문화정책과 사업 캠페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화정책 집행

- 현존하는 문화정책이 개별 주력 사업에 무원칙적으로 종속되는 방식의 파행적인 정책 구조
 - 콘텐츠 세계화, 관광 대국 등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주력 사업을 위해 기존 문화정책들이 파편화되고 종속되는 파행적 문화정책 구조 운영
 - 예술, 전통문화·문화유산, 지역문화, 청년, 체육·스포츠, 생활문화 등에 대한 문화정책의 과제와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콘텐츠 세계화, 관광 활성화 등으로 종속시키는 사업화 추진

(3)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현황

■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에 공개된 보도자료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실질화된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 2023년 1월 1일 ~ 현재까지(4월 27일 오후 6시), 보도자료 게시판 번호 10648~10872(총 225건)

- 빈도수 조사는 보도자료의 제목과 주요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책·사업 주제별로 분류 : 핵심 키워드를 복수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책·사업 주제별로 중복 적용하였음

■ 보도자료 주제별 빈도수 분석 결과

주제	빈도수	비고
K-컬처	65	
관광·여행	39	
콘텐츠	36	
체육·스포츠	26	
홍보	26	· 대통령, 장관, 부처 단순 홍보 등
저작권	12	
지역문화	12	
법률·제도	11	
국제교류	11	
예술	10	· 홍보성 보도자료 외에 실질적인 예술 정책 관련 내용은 2건
장애인 문화·예술	9	
청와대	8	
출판·도서(관)	7	
문화유산·전통문화	7	
정책계획 발표	5	
언론·미디어	4	
게임	4	
디자인	3	
대중음악	2	
영화	1	
만화·웹툰	1	
기타	23	· 단순 안내, 인사 조치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계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
- K-컬처, 관광·여행, 콘텐츠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실질적인 문화정책 집행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에서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영역이나 사업들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음
- 예술의 경우 모든 장르를 포함하여도 보도자료 빈도수가 10건에 불과하며 이조차 단순 행사성, 홍보성 보도자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예술정책 보도자료로 접근하면 단 2건에 불과 :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최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 문화산업의 경우도 윤석열 정부의 주력 사업인 K-컬처, 콘텐츠 세계화 등을 제외한 기존 문화산업 정책의 경우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영화 1건, 만화·웹툰 1건

3.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빈곤한 방향성과 통합된 정책 구조의 실종

-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가치로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며, 이를 문화정책에도 적용하였으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는 정책적 개념화, 방법론 등은 부재한 상황
 - ‘자유’의 경우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검열 사건 발생. 오히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정책 기조 운용
 - ‘공정’의 경우 ‘장애인 예술’로 매우 제한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 역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나 문화환경 개선보다는 개별화된 홍보성 사업으로 추진하며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현장의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정책 의제화된 문화 분야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문화융성’처럼 ‘매력국가’를 정책적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매력국가에 대한 설명 없이 오직 시대 착오적인 성장주의·발전주의 수준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만 강조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들이 대부분 ‘매력’이라는 용어처럼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정치적으로 희석화, 탈개념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준비조차 못하는 상황

(2) 과도한 성과 중심의 개별 사업 구조화

- 문화정책의 통합성, 전문성, 협력 체계(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거부한 채 철저하게 개별 과업,

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반복

- 정부는 문화정책의 전체 비전, 가치, 정체성 등에 기반하여 개별 정책과 사업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우 자신들이 관심 있는 개별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
- 문화정책의 성과지표에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직 가시적인 수치(수출액, 관광객수, 참여율 등)로만 환원하고 있음

(3) 문화정책의 불균형성 심화와 편향된 사업 구조

- 윤석열 정부의 관심 주제인 K-컬처, 관광·여행, 콘텐츠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비정상적인 문화정책 구조를 강요하고 있음
- 이에 예술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체육, 문화유산·전통문화 등 현존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영역이나 사업들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배제되고 있음
- 국가 문화정책이 책임져야 할 중장기 관점의 정책 환경(법제도, 인프라, R&D, 거버넌스 등)의 경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

(4) 배타적이고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따른 정책 전문성 실종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가 캠프 내 기자 출신. 문화정책의 전문성 부족과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한계
-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공론장과 협력 체계가 심각하게 무력화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용이 드러내고 있는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문화정책의 맥락에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 문화협력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폐지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경우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 요구로 폐지를 결정하는 물의를 일으켰음
-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과 문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가 권력 주도의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5)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퇴행적인 문화정책 운용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 시기 문화정책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다중위기(생태위기, 사회구성체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연구)과 다양한 노력(제도화)이 필요한 상황
- 국가 문화정책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기술 자동화, 초고령사회, 지역 불균형, 계급 양극화 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이를 위해서는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결과 대응으로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매우 단기적이고 폐쇄적인 개별 사업 구조로 문화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

(6) 과잉된 관료주의와 법제도의 무력화

- 윤석열 정부의 탈-거버넌스(일방주의), 탈-정책화(개별 사업화), 탈-맥락화(사회 변화 및 흐름 무시)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관료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국가 주도 문화정책 과정에서 견고해진 관료주의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더욱 힘을 받아 일방적인 관료주의, 편의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성찰과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문화행정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주의, 관료주의 등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과 관료주의화는 중앙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며 문화정책의 상식과 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 : 원주 등 문화도시 파행 사례, 각종 지방자치단체 축제 파행 사례 등

4. 현 시기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1) 특정한 시기, 특정한 정치권력을 위한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과 문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정책 만들기

- 이미 문화 현장은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등을 통해 많은 상처와 피로감을 가지고 있음
- 문화 현장 스스로의 다양한 사회적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만 민-민, 민-관 거버넌스의 회복과 새로운 형성이 가능
- 정부와 행정은 바로 문화 현장의 활동에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문화정책을 시작해야 함

(2) 다양한 공공기관, 전문기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행정조직은 비전문가인 정치인, 공무원이 전문가인 문화예술인에게 충고하고 지시하는 것이 일반화 된 괴이한 세계
- 전문성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전문기관을 전문성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관리, 통제하여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로 작동하고 있음
- 이들에게는 일의 전문성이나 시민의 권리보다는 대통령, 장관, 국과장님들의 심기 의전을 위한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
-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특별한 위원회나 제도가 아니라 문화 전

문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혁을 통해 수평적 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것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로 전문기관들과 중복 업무를 하며 불필요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혁신과 중복업무 전문기관 이관, ②문화체육관광부와 전문기관 사이의 전문기관 책임 운영제와 수평적 업무체계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 ③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문기관장들 사이의 실질적인 권한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상설화 등을 추진해야 함

(3) 국가 정책 차원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책 시급

- 지구적인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 경제적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문화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국가, 지구적(행성적) 차원의 정책들

-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국가와 도시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계해야 할 시기

- 이를 위해 ①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의 문화적 연계와 가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국가 단위 위원회 설치 등), ②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사업별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확립(문화정책비전위원회, 전문기관장 협의체, 지역 문화위원회 등), ③문화예술 거버넌스 관련 형식화된 위원회의 수는 줄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제도화 등이 필요

(4)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혁신이 윤석열 정부의 시간 동안 불가능하다면, 국회에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화 추진이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발제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 예술인권리보장의 입법불비(立法不備)와 비민주적 통치전략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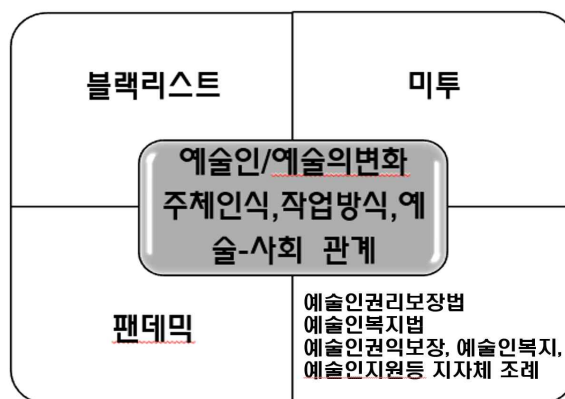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1. 사건으로 촉발된 ‘예술인권리보장’ 제도화

예술의 정의와 개념은 국가, 사회, 예술인의 관계와 제도 내에서 실질적 존재 방식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무엇이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가? 누가 인정받은 작가이고 무엇이 우수한 작품인가?’ 이제 예술-예술가의 자격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식별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공공정책조차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간다. 때로는 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예술의 명제를 ‘엘리트 예술에 갇힌 예술인들의 이기심’으로 호도하기도 한다. 본 발제에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 관련 법제의 제도화와 실행체계를 검토하고 입법불비의 실질적 문제와 함의를 부각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¹⁾’는 국가와 행정 체계, 예술/예술인의 관계가 전근대적인 위계 속에서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블랙리스트, 미투, 코로나 팬데믹은 창조적 신화 속에서 삶의 곤란을 숙명으로 여겨온 예술인들에게 ‘안전한 창작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문화정책 패러다임은 예술인과 예술의 주체 인식, 작업방식, 사회관계에 따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정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국가와 지역간 유기적 체계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 받았다.

※ 예술인지원정책 패러다임 배경



1)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예술인에게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검열, 사찰, 배제, 차별한 국가 폭력이다. 국가가 헌법을 비롯한 총체적인 법제도를 위반하여 국가조직의 최상부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 산하기관 및 예술지원 단체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특정 예술, 예술인들에게 차별과 배제 등을 실행한)벌어진 반헌법적 국가범죄이다.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및 진상조사 위원회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공고화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국정원을 위시하여 국가 문화행정 체계를 총동원한 정책 범죄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주요 실행기관으로 블랙리스트 책임(자) 구명 및 처벌, 미진한 진상규명, 피해자(명예) 회복 등을 위한 후속조치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제도개선을 공고화하기로 약속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의 토대가 되었던 수직적 관료주의의 패착 문제를 근절하고 하청계열화된(대통령실-기재부-문체부-공공기관-지역단체) 전달체계에서 ‘예술현장에 권한이 있는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의 방향은 ‘① 공익을 위한 진흥’에서 ‘예술의 내재적·사회적 가치 지원’으로 본질적 목표를 전환하고, ② ‘문화예술계의 이권’에서 ‘삶·사회에서 예술적 가치가 창조되는 모든 과정’으로 예술의 개념과 가치를 확장 시키는 것으로 ③ 국가기관과 공공정책 중심의 공급’에서 ‘현장(지역) 예술생태계의 형성을 지원하고 ④ ‘새로운 의제 개발 및 사업화 중심’에서 ‘사회적 자원 분배와 공유를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 ⑤ ‘획일적인 성과와 결과만 있는 사업체계’에서 ‘불확실한 경과와 과정이 존중되는 사업체계’로 예술 지원의 행정체계를 개혁하고 평가와 성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평가체계로의 변화가 그 내용이다.

- 긴급재난 지원의 정책과 시스템화

사회적 재난 시대에 긴급지원이 선별적, 임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위기의 국면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긴급제도는 경직성이 두드러진 수직적 관료 행정으로 드러났다. 예술인을 관리-지도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 지난 4년간 축적된 긴급재난 대응 경험이 매뉴얼과 컨트롤 타워의 구성 등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의 제4조 2항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추가하면서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항목이 담겼다. (2023.4.11.)

- 특수한 피고용 지위의 예술노동

2020년 12월 예술인고용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을 특수 고용 지위의 노동으로 개념화하고 가입조건을 두어 노동시간, 평균소득을 표준화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14만4248명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예술인에게 보험 가입 진입장벽이 높고, 사회 보편적인 실업급여에 비해 예술인 실업급여는 매우 낮아서 이미 근로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일반 고용보험보다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회사의 부담을 낮추는 추세다.

- 성평등 정책의 확산

2016년 미투 이후 성평등 소위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적 반영에 난점은 존재 해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실행체계가 보다 공고해진 만큼 예술인지원체계와 유기적으로 작동가능한 성평등 정책의 확산이 필요하다.

2.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체계 진단

예술인권리보장 정책과 제도는 예술인의 예술적 자유 보호와 삶의 조건을 구성한다. 한국의

예술지원 제도는 보조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을 소위 독립적 지위의 자영업자 신분으로 개별화했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문화도시 및 각종 지역의 문화복지,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한 공공 프로젝트는 예술인을 창업자, 소상공인의 직업으로 구체화하여 용역 계약을 맺도록 촉진한다. 『예술인복지법』은 프리랜서, 각종 임시직의 지위로나마 예술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수용을 취했다. 『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에게 예술적 자유를 보장하며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명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1년 8월 30일 예술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성평등 권리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침해 사실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1월 26일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핵심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제정 이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통해 업무재해에 대한 보호, 불공정 계약, 성희롱 성폭력 대응 등 예술인 권리보장을 포괄한다.

1) 『예술인복지법』²⁾에서의 예술인권리보장 제도화

예술인복지법에서의 권리보장 관련 제도화를 다음과 같이 표³⁾로 정리하였다. 주목할 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권리보장 내용은 없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불공정행위의 금지, 재정 지원 중단 등 권리침해 행위자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예술인권리보장 정책은 금지와 중단 등의 제한 사항에 국한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을 확인해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기능이 제도, 정책, 인적자원 관련 예산투여 없이 형식에 머무를 수도 있다

※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고도화

개정 목적	개정 내용
권리보장 14. 3. 31.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의2(실태조사)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불공정 계약 16. 5. 4.	제2조(정의) 조문 통합 제4조의2(실태조사) 조사 주기 명시(3년)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계약)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위탁)
성희롱 성폭력 대응 19. 1. 17.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포괄적인 예술 활동 권리 명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근거 마련 제4조의2(실태조사) 복지정책외 예술인 권익보호 목적 명시
정책 수립 20. 6. 4.	제4조의2(예술인복지정책기본계획)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권리보장 법 제정 22. 9. 25.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삭제

2) 제정 (2011. 11.17.) 시행 2012. 11. 8.

3) 블랙리스트 이후(준) 주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3-2027)>에 대한 사회적 토론회 김상철 발제문 참고 (2022. 2.14)

2) 피해 구제 절차

① 신고

예술인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권리보호> ‘예술인신문고’ 또는 ‘성폭력 피해 지원’ 카테고리에서 상담(온라인, 서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대략 63건이며 상담요청 게시물 제목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파악해보면 불공정 계약, 갑질, 저작권과 관련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성폭력 피해 상담 신청은 현재까지 2건이고 신고 건수와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 사건의 유형과 구제 조치의 기준, 구제조치를 받은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 피해 구제절차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p>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권리침해 행위 유형: ① 불공정행위, ②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 ③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 ④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⑤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 법률 상담, 사실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p>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권리침해 행위 유형: ① 불공정행위, ②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 ③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 ④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⑤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 법률 상담, 사실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p>한국예술인복지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p>한국예술인복지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조사	<p>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행위 관한 조사 ▶ 분쟁조정 지원 	<p>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 피해자에게 구제절차 설명 	
심의·의결	<p>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 시정명령 요청 ▶ 분쟁조정 	<p>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사건 심의 ▶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 시정명령 요청 	
구제 및 사후 지원	<p>문화체육관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조치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재정지원중단 ▶ 불이익조치금지 	<p>문화체육관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재정지원중단 ▶ 불이익조치금지 	<p>관리보장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의료, 민·형사 소송 연계 관리 및사후 관리

② 조사

조사는 문체부 예술인보호관 즉 예술정책관(국장)이 담당한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 방향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알수 없다. 문체부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른 예술정책관의 주요 업무에는 예술인권리 보장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당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취지와 상충되는 지점이다. 권리침해 조사 업무를 ‘예술인지원팀’ 주무관이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 주체의 특성상 법제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③ 심의·의결

2023년 1월 26일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구제절차 안내에는 <권리보장위원회>와 <성폭력·성희롱 구제위원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법에서는 두 개의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 권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모호하다.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12명의 의원은 불공정 사건과 성평등 관련 활동의 이력이 있거나 예술 활동의 이해가 높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누가 최종후보를 결정하고 추천 사유는 무엇인지 알수 없다. 발족 이후에도 현재 어떤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술 현장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가령 권리 침해 행위자와 지속적인 협력의 이력이 있다면 더욱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불투명한 권한 행사의 주체들로부터 협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 그와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④ 구제 및 사후지원

심의 의결된 사안에 따라 문체부는 구제조치와 사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법 제정 당시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중심으로 구제 조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으나 위의 표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가 성폭력·성희롱 구제에만 표기되어 있다. 예술인권리보장 법률안의 내용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구제 대응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겼지만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보호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능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지는 미지수다. 정작 예술인권리보장 파트에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가 없는 기이한 구조라고 할 수밖에 없다.

⑤ 예술인지원팀

문체부는 당초 직제개편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과’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예술인지원팀’으로 신설했다. 예술인보호관(예술인정책관) 산하의 팀 조직으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소개

-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김수현 (팀장)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총괄업무
신나라	044-203-2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제도 ○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및 지원(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과 국회
최원배	044-203-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예술인 복지 사업(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사회보험료 지원 등) ○ 예술인 복지 예·결산 ○ 표현의 자유(지원사업 관련 불공정성)
김태훈	044-203-2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관련 업무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 권리침해행위 등 조사, 분쟁조정 ○ 서면계약 활성화 및 권리보호교육 ○ 성희롱성폭력 방지, 심리상담
조성학	044-203-270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서면계약 위반 등 피해 사건 조사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서면계약 활성화 및 교육
전경도	044-203-2727	○ 예술인 복지
김주원	044-203-2716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예술 생태계 조성 관련 업무 ○ 예술인 심리상담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input type="checkbox"/> 서무
전재민	044-203-2722	예술인 지원정책 예술인복지법 및 제도개선 과 국회

주로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한 업무이며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사안에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수행하기 보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구제 위원회> 운영과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일찍이 문체부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불공정 및 예술인 권리 보호의 제도화가 고도화될 때마다 문체부가 책임져야 하는 과제들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위임된 사실을 감안해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를 통

합하고 이관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문체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3-2027)>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의무화한 권리보호 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기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되어 기존의 3년 주기의 예술인실태조사와 통합하려는 의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3) 지역 분권에 따른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전달체계와 정책 확산 경로의 미비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체계 준비는 미비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유튜브에서 상영되고 있는 설명자료가 있어도 정작 정책 수용자인 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존재를 잘 모른다. 하물며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대응하면서도 법제정에 따른 피해구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정책을 촉진시키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 확산 경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정 광역단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예술인들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전문 기구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술인 통합지원센터’ 성격의 기구를 운영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 조례가 제정되는 추세다. 문화예술생태계가 내포하는 불평등한 권한 분배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의 취약성은 권리 침해를 촉발하는 원인이며 행위자임을 간과할 수 없다.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질은 문화예술생태계의 먹이사슬로 뒤튼어진 내적 구조를 혁신했을 때야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침해 사건이 발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문체부의 피해구제 절차와 전담팀의 역할과 과제 쟁점을 살펴보며 윤석열 정부 문체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문체부가 지금까지 밝힌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홍보자료를 보면 ‘불공정과 성평등 성희롱 분야’의 구제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 ‘는 언급하지 않거나 예술인 권리로 모호하게 표현해왔다.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한 예술인복지 정책의 고도화가 있을 때마다 그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응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책임과 시행을 위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예술인복지법을 고도화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도태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3. 윤석열 정부에 좌초된 예술인권리보장 법제

1) 예술인권리보장이 실종된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7. 26)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약속 11] 국민이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확립(문체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예술인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32개 과제 중 57번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이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으나 실상 예술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 우위에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예술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주의 원리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예산과 정책은 실종됐었다. 그러다가 예술인권리보장과 연관된 항목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계획을 살펴보았다.

2)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계획

예술인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예술인정책관의 재정집행계획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의 명목으로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예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창작안전망 운영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사업 수행 주체의 대부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그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체계와 정책개발 관련 예산은 확인할 수 없다.

※문체부 2023년도 예술인 정책관 재정 집행계획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7,985	86,899	29,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 사업기간 : 2012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예술인 직업·창작역량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 및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수행주체
직업역량강화	8,726	8,726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	62,004	68,9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관행 개선	2,281	3,541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1,130	1,37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안전망 운영 지원	239	268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3,605	4,08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합계	77,985	86,899	

작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계속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22년 5월, 5·18 거리미술전 광주시 후원명칭 취소 사건 ▲7월, ‘성노동’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술작가를 퇴출한 ‘성평등전주’ 검열사건 ▲8월,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금정굴이야기> 방송 불허 사건 ▲9월, 부마민주항쟁문화재단-행안부 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사건 ▲10월, 윤석열차 검열 사건 ▲12월 서울 도서관 <서울아트책보고-예술과 노동 전시> 예술검열 ▲올해 1월 국회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검열·기습철거 사건이다.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의 대표적인 예술검열 사건

1. 2022년 5월 13일 : <광주광역시>가 ‘호명呼名 18거리미술전’에 윤석열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걸리자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면서 후원을 취소한 사건
2. 2022년 7월 16일 : <행정안전부>가 전주시에 위탁한 기관<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가 주최하는 ‘페미니즘예술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3인을 퇴출한 사건
3. 2022년 8월 23일 : <EBS>가 ‘EBS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금정굴 이야기’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송 불가를 판정한 사건
4. 2022년 9월 26일 : <행정안전부>가 개입하여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기획한 기념 행사에서 ‘가수 이랑’의 노래를 검열하고 공연 배제한 사건
5. 2022년 10월 4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진흥원>이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한 윤석열차 예술 검열 사건
6. 2022년 10월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하 작가를 검찰에 송치한 검열 사건
7. 2022년 10월 :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김건희 여사 풍자 시가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를 중단한 사건
8. 2022년 10월 27일 : <대전광역시>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개최하는 북콘서트 참여작가의 성향을 들어 불허한 사건
9. 2022년 12월 29일 : <서울도서관>이 서울아트책보고-예술과 노동 전시를 검열한 사건
10. 2023년 1월 8일 : <국회 사무처>가 ‘2023굿바이전인서울’을 검열하고 기습철거한 사건
11. 2023년 4월 : <대구광역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 베토벤 제9번 교향곡을 종교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공연 불허한 사건

12. 2023년 4월 예술의전당이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 공연 제목을 문제삼아 대구에서 이 곡의 종교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팸플릿 내부 내용도 검열해야 한다며 배포를 막은 검열 사건
13. 2023년 4월 18일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검열을 제도화함

4. 예술인 통치술과 예술인권리보장 입법불비의 불가분 관계

반복되고 있는 예술 검열 사건은 마치 블랙리스트 시대가 회귀한 것 같다.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 권리를 다루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현재의 실행구조로 예술 검열 사건의 문제 해결은 어렵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도 표현의 자유 전문가는 없다.

문체부가 예술계와 불통하기 때문에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관련 기사에서는 문체부가 일관되게 ‘검열이 아니다’ 라고 답하거나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문체부가 과연 표현의 자유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과업으로 인정하는지의 구심이 든다. 만약 소극적인 법 해석의 차원에서 검열 기관의 성격이 법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라면 문체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점을 입법의 불비(不備)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과 수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황 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체부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전파행위를 보호’ 하는 대신 <윤석열차 검열>로 ‘표현의 자유 권리’ 를 직접 침해할 하였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검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정치오염예술’ 과 ‘순수예술’ 을 가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몰이해를 드러냈다. 동시대 예술이 유희주의적 입장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역할, 장르, 형식의 경계를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해석하고 반영하고 개입하는 방향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⁴⁾.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차 검열> 사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 오염시킨 게 문제” 라고 하였다. ‘예술인권리보호관’ (예술정책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검열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가시화된 예술검열 사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활동방해, 갑질을 당한 예술인들은 사건을

-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2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윤석열차>가 금상을 수상하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 5) 대표적인 미학자 아서단토(Arthur Danto)는 이미 1960년대에 미학적, 역사적으로 전개된 장르 중심의 예술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다중적이며 실험적이고 새로운 예술의 시작점으로서 ‘예술의 종말’의 개념을 제시했었다.

진정하기 위하여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기보다 인권위나 권익위에 신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직장내 갑질을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인들이 예술인 조합을 만들더라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 권리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정부 분할 통치한 사례를 참고로 추측해보면 분할 통치가 일종의 사회운동 세력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내걸고 결혼 이주 여성은 가부장에 기반한 동화주의에 기반하여 수용하였고 남성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다. 장애인, 성소수자 운동 세력을 배제시키는 소위 갈라치기라고 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을 구사하였다. 필자가 경험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을 돌이켜 보면 문체부는 이 갈라치기 전략을 잘 활용해왔다. 예술인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공정과 성평등에 주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예술 검열의 문제- 표현의 자유-의 운동세력과 내용은 지위버리거나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블랙리스트는 반성하고 성찰할 사안이 아니라 단지 운이 나빠서 걸린 바로 삭제해 버려야 할 것이며 그 맥락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으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사라지기 바라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이유로는 검열 행위의 주체가 문체부 자신을 비롯 하청관리 체계 구조의 일부인 공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나, 예술인들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장르, 성별, 세대 각각 장벽을 세우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선정과 탈락의 저울에서 위태롭게 버티며 침묵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라는 기표 아래 예술인지 아닌지를 자신이 결정하고 통치하겠다는 기의가 바로 ‘입법불비’ 아닐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에 처한 무수한 예술인들에 대한 대안은 부재했다. 마치 특별 이벤트처럼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예술활동 증명’을 지원 조건으로 걸면서 예술활동증명 이슈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책임을 오로지 예술인복지재단에 떠넘기고 문체부는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한 적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발표하며 추진한 구조조정은 공무원과 공공 기관이 정권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공공은 문화예술생태계의 포식자로서 수직적 관료 행정을 토대로 빈번하게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 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문화예술계에 미칠 악영향은 블랙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예술가들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고용 예술가이든 자영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사회보장, 노동 및 세제상의 여건들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예술가들의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 선택, 결성하고 회원이 될 자유와 권리, 예술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0년이 지나 우리 사회는 이 권고안을 참고삼아 예술인권리보장 법률안을 구성하였다.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난 정부와, 현장 예술인들의 숙원 과제였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숙지하고 이미 했어야 할 과제를 수행해 가는 것이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자신의 치부를 삭제하고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전략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체계의 문제와 입법불비를 촉발하는 문체부의 통치전략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별 예술인들이 버티기보다는 문제를 사회적 공통 감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주권자의 권리로 국감을 통해 문체부를 모니터링하고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며 비틀어진 행정의 문제를 더 나은 민주적인 행정체제로 개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속에서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로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

토론

송경동

시인, 한국작가회의

【토론문】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내 특위(TF) 재설치 권고를 중심으로

송경동(시인. 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 등)

1. 배경 및 취지

○ 지난 정부(이명박·박근혜) 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올바르게 투명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이에 따른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및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임.

○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 활동과 이에 따른 정확한 국가(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지 않으면서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왜곡 및 지속적인 2차 가해와 피해, 그리고 유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 18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의 자문위원회로 조사권한 미비, 조사 인력 및 조사기간의 현저한 부족, 정부·국회 등의 실행의지 부족(2017년 관련 위원회의 예산 전액 삭감 등) 등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함.

※ 주요 실행기관이자 각종 협력·연루기관으로 조사된 청와대, 국정원, 기재부, 경찰 및 문체부 및 산하 기관의 상층 연루 인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는 전무한 상태로 마침

○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은 “국가 권력이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하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문화예술인) 수만 명을 불법적으로 감시, 통제, 검열, 배제, 차별한 국가범죄 행위”로 이에 따른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책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무너지고 유린당했던 헌법 수호를 위한 국가와 정부, 의회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다름 아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정의 : 불법적인 국가조직범죄로 인해 총체적인 헌정 유린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 ▲ 국민기본권 침해 :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 개인의 정보보호, 문화권 등 유린 ▲ 헌법의 기본정신 훼손 : 헌법 내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화국가원리, 평등원칙 등 부인위배, 개별 법률 등에 대한 총체적·근본적인 법률 위반. 헌법 내 ‘개인의 자율적 이성’ 및 ‘다원적 세계관’ 부정 유린 등

※ 서울고등법원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에 대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이라고 신고하였음.(2018.1. 23.선고 / 2017노2425 / 2017노2424(병합))

○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은 ▲ 위 문체부 장관의 한시적인 자문기구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줄임)'와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로서 당시 특검에 의해 추진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김기춘, 조운선, 김종 등)과 ▲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진한 '민사소송' 등에서 고립적, 분산적, 부분적, 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됨.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총괄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도달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서 국가, 정부, 의회 등 국가기관이 해당 사건의 투명한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태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임.

○ 2018년 미진한 진상 및 책임규명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2차 가해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 당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민주당 내 '(가칭)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민간합동으로 설치기로 약속되었지만 이후 현재까지 약속 이행이 공전되고 있는 상태로 당시 정부여당으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과 약속에 대한 이행이 요구됨.

※ 【관련 뉴스】 2018.11.06. / KBS 방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과 후속조치를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화 예술인 모임인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블랙리스트 TF'를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등을 검토하고, 블랙리스트로 삭감된 예산 사업도 파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블랙리스트 책임자는 조사 중이고 일부는 처벌해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기엔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엄한 것은 엄한 대로,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처벌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은 면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제인 대통령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 구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2. '특별법 제정' 진행 방향

○ 지난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의 책임 당사자로, '특별법 발의 TF' 구성 약속 등 여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해당 심대하고 광범위한 헌법유린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하며 총체적인 진상규명 등에 이르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 방기와 과오, 실책 등에 깊이있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기를 바램.

○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기 약속되었던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등'을 위한 <블랙리스트 TF>(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 민·관(국회 민주당 등) 합동으로 구성함.

○ <블랙리스트 TF>(가칭)는 지난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등의 성과와 한계, 현황 및 과제 등을 조속히 정리 평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고하며, 이러한 미진한 진상 규명 등의 사회, 국가적 책무를 책임 있게 수행·이행해 나가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민·관 실무 협의 및 국회 내 추진기구로 기능함.

○ 민간 문화예술계는 국가와 정부, 의회의 위 ‘특별법 제정’ 운동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인 2023년 5월 10일 민간공동대응기관인 ‘블랙리스트 이후(준)’ 출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음. 위 기관 등을 통해 국가와 정부, 의회 차원의 미진한 진상규명 활동에 관련 피해자 집단이자 주권자 집단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책임을 함께 해 나갈 계획임.

○ <블랙리스트 TF>(가칭)는 특별법 제정 운동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블랙리스트 추가 발생 사건들 등에 대한 국회 내 소통 및 대응기구로 기능함.

○ <블랙리스트 TF>(가칭)는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에 이르려는 활동 외에 추후 발생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예술인 노동권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방안 포함) 등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9월 제정되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한 법률>의 제대로 된 시행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재개정 등에 힘씀.

○ <블랙리스트 TF>(가칭)는 위 미진한 과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사회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며 총체적인 진실규명 등에 이르렀다는 평가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지속·항시·계속적으로 운영함. 이러한 진정성 있는 추진의 1차 책임주체는 위에 적시한 지난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해당 헌법유린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국가·정부·국회 등)이 되어야 함을 확인함.